

캄보디아 2017: 민주주의의 붕괴

정연식*

<국문초록>

캄보디아의 2017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 모범적인 선거였다.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을 해산했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더기로 폐쇄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사회는 고도의 감시와 사찰 속에 극도로 위축되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형적 성장 이면의 구조적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주제어: 캄보디아, 지방선거, 훈 센, 캄보디아인민당, 캄보디아구국당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I. 들어가는 글

캄보디아의 2017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정치적 퇴행으로 얼룩진 2016년(정연식 2017; O'Neill 2017)을 뒤로 하고 캄보디아의 2017년은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열망으로 시작하였다. 6월 선거는 그 자체로 큰 성과였다. 캄보디아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공정성을 인정받은 선거였고 처음으로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였다. 더욱이 선거 결과는 2018년 총선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낳았다. 그러나 그것은 곧 백일몽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야당 대표를 반역 혐의로 구속한 후 야당을 해체해버렸다. 야당 정치인들은 서둘러 캄보디아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 폐쇄가 그 뒤를 이었다.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와 사찰은 최고조에 달했고, 공포와 침묵 속에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일당지배체제가 구축되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훈 센(Hun Sen) 총리는 자신을 비판하려면 ‘먼저 관부터 짜라’고 겁박했다(Cambodia Daily [이하 CD] 2017/06/22).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붕괴되어간 과정을 훑아보고, 아울러 경제와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치

1. 선거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총 1,646개 콤(khom) 의회 11,57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다. 선출방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로 의석을 배분하고 최다득표 정당의 1번 후보가 콤의장이 된다. 콤은 도/시에 해당하는 켓(khet)/크롱(krong), 시/군에 해당하는 칸(khan)/스롯(sroc) 아래의 행정단위로서 우리의 읍면동 수준에 해당한다. 상급 행정단위의 장은 모두 임명직이고 콤에 주어진 권한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지방자치의 수준은 아주 낮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선거라기보다는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 대결의 성격이 강하며 익년에 치러지는 총선의 전초전 역할을 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 점이다. 그동안 캄보디아의 선거는 예외 없이 늘 공정성 시비가 뒤따랐다(정연식 2015; 2016).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사안은 주로 유권자 명부 조작과 유령 유권자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전산화된 새 명부에 근거해 실시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종식할 수 있었다. 2015년 9월부터 3개월간 유권자 등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콤프렐(Comfrel) 등 선거감시단체들의 검증 받았다(CD 2017/04/12). 2013년 총선 후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이하 구국당)과 시민단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성과다. 선거 전 구국당은 유권자명부에 베트남인 4,893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개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CD 2017/01/11) 구국당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뒤이어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해 손가락에 찍는 잉크가 지워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공개적으로 실험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유권자명부의 정확도가 검증된 상태에서 잉크 문제는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실제로 선거 후 구국당도 공정한 선거였다고 평가했고, 1천여 명의 선거감시단을 운용한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한 다수의 선거감시단체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공정한 선거’라는 평가를 내렸다(Comfrel 2017; Transparency International Cambodia 2017; CD 2017/06/23). 결론적

으로 2017년 지방선거는 1993년 첫 총선 이후 공정성 시비 없이 모두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최초의 선거가 되었고, 향후 기존의 유권자 명부를 바탕으로 미등록자와 신규 유권자들만 추가 등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얻은 선거였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12개 정당이 후보 94,595명을 등록하고 참여했지만(CD 2017/03/07) 실질적으로는 2013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이하 인민당)과 구국당의 양당 대결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선거는 정책과 공약 없이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 자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각종 구호들만 넘쳐난다. 구국당이 선택한 대표 구호는 '(인민)당을 위해 일하는 콤팡들을 바꿔, 인민을 위해 일하는 콤팡들로 바꿔'였다. 그런데 인민당 소속 현직 콤팡들이 일제히 구국당의 구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서자 구국당은 순순히 이 요구를 받아들여 '변화'로 대체했다. 구국당은 또한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모든 콤팡에 50만 달러씩 예산을 배정해 자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CD 2017/05/23). 계산해보면 8억 달러 정도로 정부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데다 콤팡 수준에서 집행할 역량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공격을 받았다.

인민당이 채택한 선거 구호는 예컨대 '흙탕길을 포장길로'처럼 주로 인민당의 업적과 경제성장 견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인민당 선거운동의 중심은 훈 센 총리의 위협과 시혜에 있었다. 훈 센 총리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연설 형식으로 구국당이 외치는 '변화'는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인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유혈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위협을 반복했다(CD 2017/03/01; CD 2017/05/24). 국방장관 떼아 반(Tea Banh)은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시

위하면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는 무자비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CD 2017/05/17), 군 총사령관까지 나서서 정부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CD 2017/05/23).

훈 센 총리는 각종 시혜성 정책을 발표하며 자비로운 군주의 이미지를 각인시켜나갔다. 예컨대 3월에는 군경을 포함한 공무원 급여 인상을 발표하고 뒤이어 지방 선출직 공무원, 즉 콰 의원 임금을 발표했다. 훈 센 총리의 약속대로라면 콰 의장의 경우 현재 약 32달러에서 2018년 220달러로 인상된다. 교원 급여 추가 인상, 퇴임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금 인상도 총리령으로 발표되었다 (CD 2017/03/20; 2017/03/22). 또한 인민당 소속 현직 콰 의원들에게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아도 급여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초법적 약속을 하는가하면(CD 2017/03/27) 프놈펜의 도시 빈민들에게 현재 거주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정책과 도심 재개발에 대한 보상액 증액 계획도 발표했다(CD 2017/05/04).

<표1> 2017년 지방선거 결과

정당	득표	득표율 (%)	의장	▲▼	의원	▲▼
캄보디아인민당	3,540,056	50.76	1,156	▼436	6,503	▼1,789
캄보디아구국당	3,056,824	43.83	489	▲449	5,007	▲2,052
훈신뻬*	132,319	1.90	0	▼1	28	▼123
크메르민족연합당	78,724	1.13	1	▲1	24	▲24
기타	165,988	2.34	0	-	10	▲1
계(+무효표)	7,107,395	100	1,646		11,572	

* 구국당의 증감 기준은 삼행시당과 인권당이 합당 이전 2012년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더한 것이다.

출처: National Election Committee (<https://www.ncelect.org.kh/khmer/content/2400>)

6월 4일 지방선거는 90.37%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인민당은 50.76%, 구국당은 43.83%를 득표해 2013년 총선 득표율 대비 각각 1.93% 증가, 0.63% 감소하는 수준에서 유권자를 양분했다. 인민당의 입장에서는 당장 콤 의원 22%, 콤의 장 27%가 감소한다는 사실도 뼈아팠지만 2013년 총선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득표율이 더욱 문제였다. 2018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2. 구국당 해산

결과부터 말하자면 11월 16일 구국당은 대법원 결정에 의해 해산되었다. 그리고 구국당 소속 국회의원 55명,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콤 의회 의원, 심지어 구국당 추천 선관위 위원들까지 모두 자격을 박탈당했다. 구국당 강제 해산은 1월 말 인민당이 국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원내 ‘소수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규정은 2013년 총선 후 법안 상정에 앞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의무화한 것으로, 이후 인민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단계로 정당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의 지도자에게 범법 사실이 있을 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삼 랭시(Sam Rainsy) 대표가 이끄는 구국당을 즉각 해산시킬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된다. 삼 랭시는 이미 복수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 사실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에 망명 중인 삼랭시는 구국당 해산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CD 2017/02/13). 하지만 새 정당법이 단지 삼 랭시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인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새 정당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정당의 당직을 맡을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정당은 해산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곧 당직자가 법을 어기는 경우에도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중대한 잘못’에는 일반 범죄 외에도 ‘국가 통일의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일반적인 정치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CD 2017/02/15).

구국당은 긴급 당 대회를 열어 대표에 껌 소카(Kem Sokha)를 선출하고 세 명의 부대표를 선출했다(CD 2017/03/01). 하지만 정부는 부대표 선출 과정이 구국당 당규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승인을 거부했다. 구국당은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 임시 당 대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선거유세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새 당규에 따라 부대표를 재선출했다(CD 2017/05/18). 한편 같은 시기에 훈 센과 껌 소카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녹취록이 온라인으로 유출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대화의 주요 내용은 훈 센 총리가 당시 구국당 부대표였던 껌 소카에게 삼 랭시와 함께 하면 위협하니 삼 랭시를 축출하고 당 대표가 되어 인민당과 협력적 관계를 맺자고 회유하는 것이었다. 훈 센 총리는 자신이 목소리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껌 소카를 구국당 대표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CD 2017/03/07).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구국당의 목소리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훈 센 정부에 대한 저항은 커녕 변변한 비판조차 제기되지 않았다. 정당법의 위력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강했다. 법적 시비에 말려들 경우 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모두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구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진해서 삼 랭시 사진이 들어간 당 홍보 입간판 철거 작업에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예산에 삼 랭시 얼굴만 천으로 가리게 되면서 초라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입간판에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선거에 참여해 승리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남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대응은 결국 더 강력한 공격에 구국당을 노출시키게 된다.

선거가 끝난 직후 인민당은 정당법 추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인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삼 랭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중대한 잘못’의 범주에 경범죄를 추가하고 범죄자는 물론이고 ‘범죄자와 동조한 자’까지 글, 사진, 음성 메시지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도 정당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정당법은 구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CD 2017/07/11). 그리고 마침내 껌 소카마저 체포되었다. 9월 2일, 2013년 껌 소카가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동영상은 온라인으로 퍼져나갔다. 이튿날 껌 소카는 전격 체포되어 프놈펜에서 200Km나 떨어진 구치소에 구금된 후 외국과 공모하여 정부 진복 음모를 꾸몄다는 사유로 기소되었다(Phnom Penh Post [이하 PPP] 2017/09/04). 훈 센 총리는 구국당이 껌 소카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범죄자와의 동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 정당법에 의해 구국당은 즉각 해산당할 수 있으며 ‘반역자’ 소탕은 껌 소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천명하면서 구국당을 위협했다(PPP 2017/10/03). 훈 센 총리의 위협은 즉각 위력을 발휘했다. 무소쭈아 Mu Sochua 부대표를 포함해 구국당 인사들이 대거 캄보디아를 빠져나가기 시작해 훈 센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뒤 5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단 20명만 국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PP 2017/10/05). 구국당은 가사상태에 빠졌다.

다음 수순으로 훈 센 정부는 껌 소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새 정당법을 근거로 대법원에 구국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구국당 해산이 기정사실인양 해산 후 구국당 몫의 의석을 재분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돌입했고, 그 후 열흘 만에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켰다(PPP 2017/10/16). 마침내 11월 16일 대법원은 구국

당 해산을 선고함으로써 지난 총선에서 44.46%의 지지를 얻었던 거대 정당은 공중분해 되었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과 총선 득표율에 따라 구국당이 보유했던 국회 의석 55석을 훈신뻐(FUNCINPEC)에 41석, 캄보디아민족당에 2석, 크메르경제개발당에 1석을 배분하고, 배분을 거부한 두 정당 몫의 11석은 인민당에 배정하였다. 인민당 의석수는 68석에서 79석으로 증가했다(PPP 2017/11/24). 콤 의회 의석도 재분배되었는데, 구국당이 획득한 5,007석 중 95%에 해당하는 4,548석을 인민당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훈신뻐를 비롯한 군소 정당들이 차지했다(PPP 2017/12/04).

3. 언론과 시민사회 탄압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없는 훈 센 총리와 인민당의 권위주의는 언론과 시민사회 탄압으로 이어졌다. 2017년 전반부에는 고소와 기소, 그리고 구속이라는 법적 장치를 악용해 비판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익숙한 방법을 동원했다. 첫 대상은 2016년 껌 레이(Kem Ley) 피살 사건의 배후에 인민당이 있다고 주장한 정치평론가 김 속(Kim Sok)이었다. 훈 센 총리가 김 속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검찰은 형사범으로 그를 구속했고 법원은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훈센 총리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향해 자신을 공격하면 모두 감옥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CD 2017/03/07).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방송인 후옛 킨 부티(Huot Khin Vuthy)는 구국당 인사들과 함께 수감 중인 아드훛(Adhoc) 소속 인권운동가 5명을 방문할 때 신분을 속였다는 혐의로 소환되었다(CD 2017/05/01). 그 다음 훈센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신문 캄보디아데일리(Cambodia Daily) 기자 2명이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다(CD 2017/05/29).

언론에 이어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선거 직후 훈 센

총리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법을 어기고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자(CD 2017/07/03) 정부는 모든 시민단체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후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선거감시를 위해 40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하고 운영한 ‘상황실’이 명백한 불법 단체라며 해체 명령을 내렸다(CD 2017/07/05).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에게 NGO법 준수를 요구하며 위반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정지 혹은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임을 밝혔다. 소위 ‘랑고’(Law on NGO)로 불리는 이 법은 시민단체들이 회계보고서는 물론 은행계좌 정보, 거래 내역, 기부자 명단과 금액, 상세 활동내역 등 거의 모든 것을 정부에 보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후반기에 접어들어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제일 먼저 캄보디아데일리에 대해 직원들의 소득세 미납분 6백만 달러 납부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폐간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CD 2017/08/07). 훈 센 정부는 또한 미국계 NGO인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를 조사한 후 구국당과 결탁하여 선거에 개입하려는 계획을 꾸몄다고 발표하고 폐쇄 명령과 함께 외국인 직원들을 추방했다(PPP 2017/08/23). 정부는 이어서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두 방송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19개 라디오방송국을 폐쇄했다(CD 2017/08/29).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캄보디아데일리는 납부 기한을 앞두고 결국 자진 폐간했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PPP 2017/09/14). 이후 정부는 NGO법을 위반한 NGO를 적발해 활동정지 처분하고, 이미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된 NGO 대표가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색깔혁명’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발표했다(PPP 2017/09/29; 2017/10/20). 그 다음 자유아시아방송 기자 2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

되었다(PPP 2017/11/20). 언론과 시민사회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훈 센 정부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국당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지원과 사주를 받는 언론과 NGO를 연결시키는 ‘색깔혁명’ 네트워크를 그려낸 후 껌 소카를 반역죄로 기소하고 구국당을 해산한 것이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붕괴되었다.

III. 경제

캄보디아 경제를 주요 지표로 평가하자면 2017년도 대체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GDP는 2016년 6.95% 성장에 이어 2017년에도 6.9%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이후 7% 내외의 꾸준한 고속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1인당 GDP도 2015년 1,163달러에서 2016년 1,270달러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300달러를 넘어 1,400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5년 1.2%로 내려갔던 소비자물가가 2016년과 2017년에 다시 3%대로 증가하면서 실질 소득은 GDP 성장률에 상응하는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2>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 지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정)
GDP 성장률(%)	7.07	7.31	7.43	7.07	7.04	6.95	6.90
1인당 GDP(달러)	882	950	1,028	1,099	1,163	1,270	
물가상승률(%)	5.479	2.933	2.943	3.855	1.221	3.022	3.7

출처: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2017년 경제성장을 견인한 핵심 산업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 산업, 그리고 의류봉제산업이다. 첫 4개월간 총 1,020건 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부동산 투자가 승인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712건 28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CD 2017/05/24). 우려할 점은 투자금액의 상당 부분이 프놈펜의 고급 부동산에 쏠려있다는 점인데, 이미 실수요를 훨씬 초과한 물량이 공급되었고 공급 예정인 상태에서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놈펜 중심부에는 고급 콘도미니엄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000세대가 공급되었고 추가로 2018년에 12,000세대가 예정되어 있다. 외곽지역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2016년 한 해 33,000채가 신규 공급되었는데 이 가운데 30% 이상이 분양되지 않았지만 28,000채가 추가로 대기 상태에 있다. 경제규모와 인구수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공급 과잉은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도 지난 4년간 2배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게 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직결될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CD 2016/01/19).

의류봉제산업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다. 2017년 캄보디아의 상품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전년도 대비 19.22%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기록이다(PPP 2017/12/28). 이 가운데 의류 수출이 70억 달러를 차지한다.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므로 의류봉제산업은 그야말로 캄보디아의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의류 수출 증가율은 2017년 5%에 그쳐 2015년 12.3%, 2016년 8.4%에 이어 둔화되는 추세다(PPP 2017/10/05). 의류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도 2014년 3억7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억4천만 달러로 감소했다(CD 2017/04/14).

의류봉제산업에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 153달러에서 2018년 170달러로 인상되는데, 이는 이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최저임금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이며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중 최고액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 중 최저지역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ILO 2016). 그동안 캄보디아 의류봉제산업의 경쟁력이 전적으로 낮은 임금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은 정체될 가능성도 커졌다. 캄보디아의류제조협회는 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세제 변경 등 각종 혜택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PPP 2017/10/05).

의류를 비롯해 캄보디아의 수출산업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난관은 EU가 저소득국가에 대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EBA (Everything But Arms) 무관세 혜택이 종결될 가능성이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캄보디아는 2016년 저소득 국가에서 중-저소득 국가로 조정 분류되었는데 이를 UN이 공식화할 경우 캄보디아는 더 이상 EBA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훈 센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EU가 UN의 결정 이전에 EBA 혜택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 부여하는 일반 최혜국 대우도 취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연말에 발효되는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베트남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 캄보디아 제품, 특히 의류제품이 누리던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캄보디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은 산업 간 불균형이 크고, 특히 의류산업 외에는 뚜렷한 수출산업이 없다는 것과 수출시장이 EU와 미국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캄보디아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다변화와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EU와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 대상국은 베트남과 중국이다. 캄보디아는 2017년 1월 베트남과의 협상을 통해

캄보디아 상품 39개 품목과 베트남 상품 29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캄보디아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6억4천만 달러에 그치고 수입액은 2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CD 2017/01/10). 최근 교역액이 급증한 중국과의 무역도 양상이 거의 비슷하다. 2016년 캄보디아의 대 중국 수입액은 39억 달러였던 데 비해 수출액은 8억3천만 달러에 불과했다(CD 2017/04/12).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는 기본적으로 EU와 미국 시장의 주문에 맞춰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에 앞서 산업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신규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건설에 집중되고 있어 산업 다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제조업 육성과 더불어 물가 안정과 소득 불균형, 특히 농촌 지역의 빈곤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World Bank 2017). 1인당 GDP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높은 물가로 인한 생계비 소액 대출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현재 전체 인구 3분의 1이 채무를 지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채무액도 1천 달러를 넘었다. 수도 프놈펜에서는 물가 급등, 특히 부동산 열기에 따른 주거비 급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빈민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18년 월 170달러로 10% 이상 인상되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할 만한 사실은 채무자의 88%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대 30%에 달하는 소액대출기관의 금리를 감당하느라 실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초 소액대출기관의 금리를 18% 이하로 제한했지만 오히려 제도권 밖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CD 2017/05/18).

IV. 국제관계

2016년 캄보디아의 대외정책을 압축하여 ‘탈월입중’(脫越入中)으로 표현했다면(정연식 2017) 2017년은 ‘친중반미’(親中反美)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변함없는 친중정책 기조는 2월초 특별한 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캄보디아 내 타이완 기계양 금지 훈령을 통해 강조되었다. 정부는 이 뜬금없는 결정에 대해 캄보디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데 따른 당연한 조처라는 설명까지 제공했다(CD 2017/02/06). 훈 센 총리는 시진핑習近平의 저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習近平談治國理政) 출판기념회를 열고 모든 관료들에게 일독할 것을 권하는 한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캄보디아의 전폭적인 지지는 ‘불가역적’ 지지임을 강조했다(CD 2017/04/12). 중국으로의 경도 현상은 이후 전개되는 반미 정책과 반비례적 함수관계를 이루며 갈수록 심화되었다(Chong 2017).

반미 기조가 처음 드러난 것은 1월 중순 미국과의 연례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부터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취소 이유로 내세웠지만 불과 한 달 전 중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마친 터여서 그리 설득력이 없었다. 친중 노선을 강화한다고 해서 굳이 미국과 척질 정도로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가 훈련 취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1970년대 초반 론 놀(Lon Nol) 정권 당시 차관으로 제공되었던 2억7천4백만 달러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감면 혹은 탕감 계획이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지불 계획 수립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CD 2017/02/06). 훈 센 총리는 직접 강력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이 상환을 요구하는 문제의 차관은

당시 미국의 폭격에 의해 농촌이 파괴되고 피난민이 급증한 상태에서 미국 농무성이 쌀과 밀가루 구매용으로 제공한 차관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아가 미국이 구국당을 조종해 캄보디아의 내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CD 2017/02/10). 돌이켜볼 때 훈 센 정부는 6월 선거 전후로 이어지는 야당 파괴 작전의 일부로써 당시에 이미 반미 전략을 확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며칠 뒤 훈센 정부는 미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뒤이어 호주와의 합동군사훈련도 취소했다(CD 2017/03/01). 이로써 캄보디아의 군사 훈련은 전적으로 중국의 지원만 받게 되었다.

4월에는 모자보건소와 학교 화장실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던 미 해군 소속 부대를 출국시켰다(CD 2017/04/04). 그 후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운용하거나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방송 등이 모두 폐쇄되었고 심지어 소속 미국인들은 강제 출국되기까지 하였다. 미국이 캄보디아 외교관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로 응수하자(PPP 2017/09/14) 훈 센 총리는 법무부에 미국 ‘간첩’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갓 도착한 평화봉사단원 철수를 미국 대사관에 요구했다(PPP 2017/09/15). 이후 껌 소카 체포에서 구국당 해산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훈 센 정부는 국가 전복 음모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훈 센 총리는 캄보디아에서 미국을 깨끗이 청산하려는 듯 지뢰제거작업에 대한 미국의 2백만 달러 지원을 거부했고, 미국의 원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공여 금액은 2017년 7천8백만 달러로 계획되어 있고, 트럼프 예산안이 관철되면 2018년에는 2천1백50만 달러로 삭감될 예정이어서(PPP 2017/06/16) 미국의 원조를 거부하더라도 그 여파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훈 센 정부가 표출하는 자신감의 진정한 원천은 중국이다. 중국은 뒤늦은 진출에도 불구하고 진즉에 최대투자

국민 동시에 최대공여국이 되었다. 총 투자액은 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총 공여액은 10년만에 10억 달러를 초과했다. 2016년 한 해만 하더라도 캄보디아에 공여된 원조 총액 10억 달러 가운데 중국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확대일로에 있다(PPP 2017/09/15). 중국은 정치와 군사 부문에서도 지원을 약속해 훈 센 정부의 확고한 신뢰를 획득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지냈고 현재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왕자루이(王家瑞)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의 장애물은 중국의 장애물’이며 ‘캄보디아의 성공이 곧 중국의 성공’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약속했다(PPP 2017/09/08). 중국은 훈 센 정부가 미국의 지뢰제거작업 지원을 거부한 직후 대체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훈 센 정부의 친중반미 노선에 즉각적으로 부응했다(PPP 2017/11/14).

미국은 구국당이 해체된 후 다시 한 번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파괴에 관여한’ 모든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한 다음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PPP 2017/12/14). 그러나 미국이 캄보디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그리 많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캄보디아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걸로 짐작컨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해 아무런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장은 훈 센 총리의 반미노선이 승기를 잡은 양상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었다.

중국을 등에 업은 훈 센 총리의 자신감 넘치는 광폭 행보는 인접 국가를 포함한 아세안 관계에서도 두드러졌다. 2월 중순 스통트렝(Stung Treng) 지방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 측이 도로 공사를 시작하자 라오스 군 병력 400여 명이 국경을 넘어 공사를 저지한 후 참호와 초소를 구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양국 병력이 대치하는 상황

이 수개월 지속된 후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간 국경 충돌은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라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CD 2017/05/12). 하지만 8월 중순 라오스 병력이 철수하지 않고 남쪽으로 이동하자 훈센 총리는 장갑차들을 이동시키며 무력시위를 연출한 후 위엥짠Vientiane을 방문해 라오스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병력의 완전 철수 약속을 받아냈다. 귀국 후에는 해당 지역에 새 여단을 창설해 배치했다(CD 2017/08/17).

베트남과의 국경 문제는 훈센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상호 진입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CD 2017/03/16).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베트남 공산당 응우옌 푸 쩡(Nguyễn Phú Trọng) 총서기가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회의사당 신축에 소요되는 2천5백만 달러 제공을 약속했다(PPP 2017/07/21).

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다른 회원국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며 중국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4월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가 채택한 성명서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데에는 캄보디아의 역할이 컸다. 8월에 열린 아세안 연례 외무장관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베트남과 충돌해 의례적으로 채택되는 공동성명을 불발시키기까지 했다(CD 2017/08/07).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추진한 ‘군사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 역시 캄보디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한편 8월 외무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성명서 초안에 이의

를 제기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표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입장과 중국이 발표한 성명서에 비해서도 표현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세안 내에서 독자 행보를 통해 자존감을 세우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인권을 위한 아세안 의원단’(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이 캄보디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인민당의 야당 탄압이 공포와 자기검열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치체제 전체를 위협한다’고 캄보디아 정부여당을 비판했을 때 훈 센 총리가 직접 나서 강력한 어조로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CD 2017/03/23).

지금까지 훈 센 정부에 대한 비판은 주로 EU의 몫이었다. 12월 구국당이 해체당한 후 EU 의회는 캄보디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그리고 EBA 혜택 정지 검토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PPP 2017/12/15). 훈 센 총리는 즉각 거친 언어로 EU 의회 결의안이 실행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원조를 조건으로 내정에 간섭하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PPP 2017/12/18). 사실 EU는 항상 인권상황 개선을 원조 공여 조건으로 제시해왔지만 인권상황이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취소한 경우는 거의 없다. EU는 일단 2018년 총선 비용 지원 약속을 취소하는 선에서 행동을 취했고, 미국도 EU에 동조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 중국 정부가 총선 지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EU와 미국의 소소한 제재나마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선관위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2018년 총선 경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PPP 2017/12/18). EU와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공조를 요구한다면 주요 공여국의 하나로 부상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사실 2017년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는 예년과 다름없이 돈독한 관계를 이어

나갔다. 1월 초 한국은 중점지원국 캄보디아에 총 4억1천7백만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해나갔다. 양국 간 교역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컨대 한국 국방부는 3월 캄보디아 군에 군사용 차량 222대와 기계장비 및 부품을 이양하고, 7월에는 해안경비정 1척과 차량 145대를 추가로 제공했다(CD 2017/03/24). 캄보디아 측에서는 4월 노동부장관이 방한해 국내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위한 송크란 행사에 참석했고, 구국당 부총재 뿔 함(Pol Ham)과 영 쓰하이 에앙(Eng Chhay Eang)이 방한해 노동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한편 북한과의 관계에서 캄보디아는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1월 외무장관 프락 소콘(Prak Sokhonn)은 신임 북한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CD 2017/01/18). 캄보디아는 이미 두 차례 한반도 비핵화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입장에 동조했다(CD 2017/07/11).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비록 아세안 공동성명의 어조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자세는 아니었다. 정리하자면 캄보디아의 한국의 돈독한 관계는 2017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2018년은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제재에 참여해야만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훈 센 총리의 유별난 한국 사랑이 순식간에 식어버릴지도 모른다. 각별한 관심으로 캄보디아의 상황을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V. 전망

12월 3일 이른 아침 캄보디아의 상징 앙코르 왓에서 거대한 법회가 열렸다. 오렌지 색 가사를 걸친 수천 명의 승려가 장관을 연출하는 가운데 훈 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 지도자로서 성수의 축복을 받았다. 악을 물리치고 다르마(dharma)로 세상을 밝히는 전륜성왕의 의식을 재현한 듯한 이 행사는 훈 센 총리가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불순 세력을 제거하고 완성한 인민당 일당지배체제, 1인 천하를 기념하고 공표하는 의식이었다. 과연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것인가. ‘선거를 통한 민주화’는 정말 캄보디아에서 실패한 것인가(Morgenbesser 2017).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8년 총선이 치러진다는 사실이다. 훈 센 총리는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이다. 매주 봉제공장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에게 국공립병원 무료 검진 및 치료와 신생아 1명당 100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총선에서 인민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금일봉 하사도 잊지 않는다. 또 사회보장기금 사업자 부담을 50%에서 100%로 변경해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노동자 거주 주택에 대해 수도요금 30% 할인도 약속했다(CD 2017/08/31). 노사정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월 165달러로 결정한 후 관례에 따라 훈 센 총리는 선심 5달러를 얹어 월 170달러로 최종 확정했다(PPP 2017/10/06). 이렇게 직접 만난 노동자가 십만 명이 넘는다. 새해 첫날 훈 센 총리는 보란 듯이 노동자 보건복지 및 출산 보조 프로그램 전격 실시를 발표했다(PPP 2018/01/02). 구국당도 해체된 터에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비로운 군주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총선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함이다. 훈 센 총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권

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해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2018년 총선은 반드시 실시될 것이다.

선거가 실시되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되살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누가 어떻게 정당을 조직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철웅성 같은 인민당의 공격을 악법의 테두리 속에서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2017년은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한 해였다.

〈참고문헌〉

- 정연식. 2015.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선거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5(1): 85-119.
- _____. 2016. “캄보디아의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퇴행.” 『21세기 정치학회보』 26(3): 179-195.
- _____. 2017. “캄보디아 2016: 민주주의의 퇴행.” 『동남아시아연구』 27(1): 193-219.
- Chong, Terence. 2017. “The Politics behind Cambodia’s Embrace of China.” *ISEAS Perspective* 59: 1-7.
- Comfrel. 2017. “Statement Overall and Ultimate Assessment on Commune Council Election for the 4th Mandate” (<https://www.comfrel.org>).
- ILO. 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 Morgenbesser, Lee. 2017. “The Failure of Democratization by Elections in Cambodia.” *Contemporary Politics* 23(2): 135-

155.

O’neill, Daniel C. 2017. “Cambodia in 2016: A Tightening Authoritarian Grip.” *Asian Survey* 57(1): 180-186.

Transparency International Cambodia. 2017. “Preliminary Statement on Cambodia’s 2017 Commune Elections.”

(<http://www.ticambodia.org/preliminary-statement/>)

World Bank. 2017.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Climbing Up the Manufacturing Value Chains.*

(<http://www.worldbank.org/en/country/cambodia/publication/cambodia-economic-monitor-reports>)

(2018. 1. 18. 투고, 2018. 1. 18. 심사, 2018. 2. 14. 게재확정)

<Abstract>

Cambodia in 2017: Democracy Collapsed

JEONG Yeonsi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year 2016 in Cambodia witnessed the collapse of Cambodian democracy. Promising results in terms of fairness the communal elections achieved were eclipsed by the dissolution of the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With press and civil society also being silenced, the ruling Cambodian People's Party expects no more challenge to its authoritarian rule. The economy continued its growth in 2017. However, serious problems embedded in its structure threaten the likelihood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mbodia with solid China backing began to amp up its voi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heading to a head-on collision with big dono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Key Words: Cambodia, elections, Hun Sen, Cambodian People's Party,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